

「지역혁신성장 동력 발굴 中企 설문결과」 분석 및 정책 시사점

구분	내용
1 지역창업 中企 인식	· 中企, 창업단계에서 교통·물류 등 '본사나 공장의 입지조건'을 중요하게 고려 * 창업시 고려사항으로 中企 36.7%가 '본사나 공장의 입지조건'을 중시, 뒤이어 '주력상품·서비스 경쟁력 확보(29.0%)', '지역 소재 발주처, 파트너 연계 및 협업가능성(13.8%)' 순으로 응답 · 中企 35.1%가 지역 창업이 유리한 점으로 '지역소재 발주처 등 협력사 연계' 선택 * 뒤이어 '창업자 본인의 출신지 혹은 거주지역 등 익숙한 환경(29.2%)', '저렴한 사업자 비용(15.8%)', '지역 특산품을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(11.1%)' 등도 유리한 점이라고 응답 · 반면, 불리한 점으로 '인재확보 어려움(38.8%)', '경영인프라 부족(15.0%)'이라고 응답 * 기타 '정부와 지자체 정책 미비(12.1%)', '제품·서비스의 판로 및 유통채널 미비(10.8%)' 등 지적
2 지역이전과 일자리 창출	· 수도권 中企 절반이상(55.0%)이 지역이전 고려, 희망지역은 대전·세종·충청권 가장 선호 * '부산·울산·경남(27.3%)', '광주·전라(16.2%)', '대구·경북(14.0%)', 지역은 '세종시(16.9%)', '충남(15.4%)', '충북(15.1%)', '부산(12.4%)', '경남(11.9%)' 순 · 中企 85.9%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'인력 더 뽑겠다'고 응답 · 지역이전시 필요한 인센티브는 '이전지원금'과 '인건비 지원'이 다수 * 中企 42.5%가 '정부보조금 등 이전지원금' 선택, '채용인력 인건비 지원(18.5%)', '생산물 판로지원(11.8%)', '세금 및 공과금 감면(10.4%)', '임직원 거주공간 제공(9.0%)' 순
3 지역특성 연계와 정책펀드	· 中企 84.2%가 현재 사업 분야와 지역특성을 연계하는데 '긍정적' 입장 * 현재는 연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연계할 계획이 있다는 기업도 44.3%에 이름 · 中企 10곳 중 8 곳은 '지역기업 육성 정책펀드'의 필요성 공감
4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지역 정주화	· 지역 중견기업과 매칭, 지역기업간 교류가 기업활동에 도움된다고 응답 * 中企 88.6%가 '지역 중견기업과 매칭 의향' 있으며, 77.5%가 '지역기업 간 교류가 도움이 될 것'이라고 응답 · 지역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융화수준은 낮음 * '지역대학, 연구소, 산단과 협업한다'는 기업은 33.2%, '지역기업인 네트워크 통해 교류한다'는 기업도 절반(47.1%)이 안되는 반면, 지역텃세를 경험했다는 기업이 58.2%에 달함
5 정책수요 및 정책평가	· 中企는 창업초기(3년차까지)에 정책자금과 고용유지 장려금 등 집중지원 희망 · 中企 72.3%가 지원정책이 '공급자 중심'이라고 응답했으며, 절차가 복잡(68.1%), 기업체 특성 미반영(73.0%), 정책홍보 및 안내 미흡(57.1%)을 지적
6 정책 시사점	· 입지, 네트워크, 인력 등 기업 활동 전반을 고려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필요 · 中企 지역이전 정책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· 지역특성 연계사업 추진과 지역 中企 정책펀드 구성에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 · 지역 중견기업 매칭, 지역전문가 육성 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통해 지역 정주화 여건 개선 ·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정책 수요자(기업) 관점으로 中企 지원사업 점검

[요 약]

I. 창업시 고려요인과 지역 창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

■ 중소기업, 창업단계에서 ‘본사나 공장의 입지조건’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

- 중소기업의 36.7%가 창업시 주요 고려요인으로 본사나 공장의 교통이나 물류 등 ‘입지조건’을 가장 비중있게 생각
- 또한 입지조건 등 인프라와 함께, ‘주력상품·서비스의 경쟁력(29.0%)’, ‘지역발주처, 협업기관 등 연계(13.8%)’, ‘창업지원금, 투자계획(7.6%)’순으로 고려

■ 지역창업의 가장 큰 장점은 ‘지역업체나 기관과 협업’, 단점은 ‘인재확보 곤란’

- 지역에서 창업하면 유리한 점으로 ‘지역소재 발주처, 협력기관과 연계(35.1%)’, ‘출신지, 거주지 등 익숙한 환경(29.2%)’, ‘저렴한 사업장(15.8%)’이라고 응답
- 지역창업이 불리하다는 응답은 ‘인재확보가 어렵다(38.8%)’, ‘기업활동 인프라 부족(15.0%)’, ‘정부와 지자체 정책 미비(12.1%)’ 등을 이유로 선택

II. 중소기업 지역이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

■ 지역이전에 대한 중소기업의 잠재적 수요가 있으며, ‘이전지원금’이 가장 큰 인센티브

- ‘지역이전을 고려했지만 미실행(25.0%)’, ‘곧 이전계획이 있다(10.2%)’, ‘이전 경험이 있다(19.8%)’ 등 지역이전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 중소기업은 총 55.0%. 그 중 이미 이전한 기업을 제외한 지역이전 잠재적 수요는 35.2%로 추정
- 지역이전시 고려사항은 본사의 경우 ‘사업장 확보(50.2%)’, ‘교통·물류환경(40.1%)’, ‘인력확보(37.8%)’ 순으로 선택했고, 연구소의 경우 ‘인력확보(50.0%)’, ‘사업장 확보(34.9%)’, ‘임직원 주거여건(30.0%)’ 순으로 응답
- 중소기업의 42.5%가 지역이전시 필요한 인센티브로 ‘정부보조금 등 이전 지원금’을 선택

■ 이전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‘대전·세종·충청’, 그 다음이 ‘부산·울산·경남’

- 이전 희망 권역은 ‘대전·세종·충청(57.9%)’, ‘부산·울산·경남(27.3%)’, ‘광주·전라(16.2%)’, ‘대구·경북(14.0%)’ 등 순으로 응답

■ 중소기업 85.9%가 지역이전시 ‘인력 더 뽑겠다’ 응답

-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, 고용창출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85.9%(유보적 입장까지 포함시 98.7%)이고 고용창출 규모(평균)는 ‘경영관리·회계·행정’ 2.0명, ‘연구개발·R&D’ 2.8명, ‘마케팅·홍보·영업’ 2.2명, ‘생산직’ 6.4명

Ⅲ. 지역 특성 연계와 지역기업 육성 정책펀드

■ 中企 10곳 중 8곳, 현재 사업 분야와 지역의 특성을 연계하기를 희망

- 中企의 39.9%가 현재 ‘지역특성과 연계하고 있고, 앞으로도 연계’할 계획이라고 응답, 또한 현재는 ‘연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연계할 계획’이 있다는 기업도 44.3%를 차지해 지역특성 연계에 긍정적인 기업이 84.2%에 달함

■ 中企 80.9%가 ‘지역기업 육성 정책펀드’ 조성시 기업에 도움될 것이라 기대

- 지역 정책펀드가 조성된다면 ‘매우 도움될 것’이라는 응답이 57.4%, ‘약간 도움 될 것’이라는 응답이 23.5%로 中企 80.9%가 기대감 표시

Ⅳ.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업 정주화 여건 개선

■ 中企 88.6%가 공동사업 진행 등 지역 중견기업과 매칭에 긍정적

- 中企의 절반이상(58.5%)은 ‘매칭경험 없지만 의향이 있다’고 응답했고, ‘경험도 있고 매칭 의향도 있다’는 응답도 30.1%로 지역 중견기업과 사업매칭에 대해 긍정적(88.6%) 응답

■ 中企 10곳 중 7곳, 지역기업간 교류가 기업활동에 도움될 것이라는 기대

- 지역기업간 네트워크가 ‘매우 도움(36.4%)’될 것이라는 응답과 ‘약간 도움(41.1%)’될 것이라고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해 긍정적인 태도가 77.5%에 달함

■ 지역 네트워크의 효과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, 실제 지역과 융화 수준은 낮아

- 中企의 33.2%만이 ‘지역 대학, 연구소, 산업단지와 협업체계를 갖고 있다’고 응답했고, ‘지역 기업인 모임이나 네트워크에 가입해 교류’한다는 기업이 절반이 안되며 (47.1%), ‘지역내 다른 기업과 불화를 겪거나 텃세를 경험했다’는 기업이 58.2%에 이름

Ⅴ. 中企 지원 정책수요 및 정책평가

■ 中企는 창업초기(3년차까지)에 정책자금과 고용유지 장려금 등 집중지원 희망

-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(중복응답)으로 ‘정책자금(85.7%)’, ‘고용유지 장려금(41.6%)’을 많이 선택했으며, 지원 시기면에서는 창업3년차까지 65.9% 집중

■ 현재 지원정책이 수요자(기업) 관점이 아닌 공급자(정부나 지자체) 중심이라고 생각

- 中企의 72.3%가 현재 지원정책이 ‘공급자 중심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, ‘지원 및 인증절차가 복잡(68.1%)’, ‘개별기업체 특성 미반영(73.0%)’, ‘정책홍보 및 안내 부족(57.1%)’을 지적하는 등 아쉬움 표현

VI. 정책 시사점

■ 입지, 경쟁력, 네트워크, 인력 등 기업활동 전반을 고려한 지역창업 생태계 조성

-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中企의 창업 중시요인(입지조건 등), 지역 유리요인(협력사 연계 등), 지역불리 요인(인재확보 등)을 종합적으로 결합해,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지역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

■ 中企 지역이전 정책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

- 지역이전을 고려했던 기업의 요인분석을 통해 中企의 잠재적 지역이전 수요를 실행단계로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지역기업 지원 정책 및 사업 발굴·제안
- 지역이전 선호지역과 非선호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 후 그에 대응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 수립 필요
- 지역이전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中企가 85.9%로 지역의 中企 유치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中 하나

■ 지역특성 연계 사업 추진과 지역 中企 육성 정책펀드 조성에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

- 지역특화산업 연계 등 지역특성 연계 지원 정책은 지역 기업유치의 유인이 될 수 있으며, 중진공이 추진하는 ‘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’, ‘지역상생 넥스트 유니콘 챌린지’ 등과 같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
- 현재는 지역기업이 지역에서 초기투자를 받더라도 후속투자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빈번, 이에 따라 지역 정책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공감대가 있으며 지역 정책펀드가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에 실제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

■ 지역중견기업 매칭 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정주화 여건 개선

- 이전기업의 지역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중견기업,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 구축, 지역 기업인 교류 활성화 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중요
- 中企 대부분이 지역기업간 매칭과 네트워크에 대해 긍정적이고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지역과 융화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
- 따라서 ‘이전기업과 향토기업간 공동사업’, ‘지역 중견기업-이전기업 멘토링 지원’, ‘지역 혁신기관 협업지원 체계’, ‘지역전문가 육성’ 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필요. 특히, 중진공 ‘글로벌 퓨처스 클럽’, ‘글로벌 CEO클럽’, ‘중소기업 융합회’ 등의 내실화도 고민

■ 정책 수요자(기업) 관점에서 지원절차 등 전반적인 中企 지원사업 점검

- 정책수요가 가장 많은 ‘정책자금’, ‘고용유지 장려금’ 등 지원정책을 창업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
-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집행, 공급자(정부·지자체) 중심이 아닌 수요자(기업)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노력

01 설문조사 개요

○ 조사 목적

- 지역 기업이전과 지역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혁신성장 동력인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방향 제시

○ 조사 개요

구 분	주 요 내 용
조 사 명	◆ 「지역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설문조사」
조사기관	◆ (주)티브릿지코퍼레이션
조사방법	◆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한 자기 기입식 온라인/모바일 조사 (중소벤처기업 19,450개 대상)
유효표본	◆ 2,188개사 (응답률 11.2%)
조사기간	◆ '21. 1. 13. ~ 18.(주말포함 6일)
주관기관	◆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국가균형발전위원회, 한국생산성본부 공동

○ 응답자 특성

구 분		기업 수 (개사)	비중(%)
전 체		2,188	100.0%
소재지 1	수도권	1,024	46.8
	비수도권	1,164	53.2
소재지 2	서울	386	17.6
	인천/경기	638	29.2
	대구/경북	259	11.8
	부산/울산/경남	384	17.6
	대전/세종/충청	209	9.6
	광주/전라	234	10.7
	강원/제주	78	3.6
업종	제조업	1,485	67.9
	도매 및 소매업	276	12.6
	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129	5.9
	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119	5.4
	기타	179	8.2
설립년도	3년 이하	641	29.3
	4 ~ 6년차	542	24.8
	7년 이상	1,005	45.9
종업원수	5명 이하	665	30.4
	6 ~ 14명	777	35.5
	15명 이상	704	32.2
	무응답	42	1.9
매출액	5억원 미만	571	26.1
	5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323	14.8
	10억원 이상 ~ 50억원 미만	851	38.9
	50억원 이상	443	20.2
대표자 연령대	30대 이하	258	11.8
	40대	662	30.3
	50대	856	39.1
	60대 이상	412	18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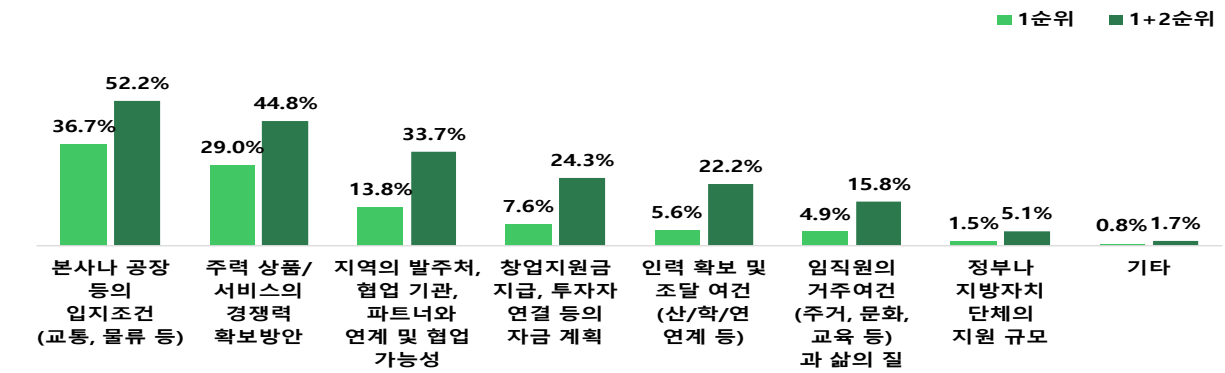
02 조사결과 분석

1 창업시 고려요인과 지역 창업에 대한 中企 인식

1 본사나 공장 등의 입지조건: 교통과 물류가 중요하다는 中企 36.7%

- 기업 창업시 주요 고려요인(1순위 응답)은 ‘본사나 공장 등의 입지조건(교통, 물류 등)’이라는 응답이 36.7%로 가장 많았음
- 다음으로 ‘주력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(29.0%)’, ‘지역 발주처, 파트너 연계 협업 가능성(13.8%)’순으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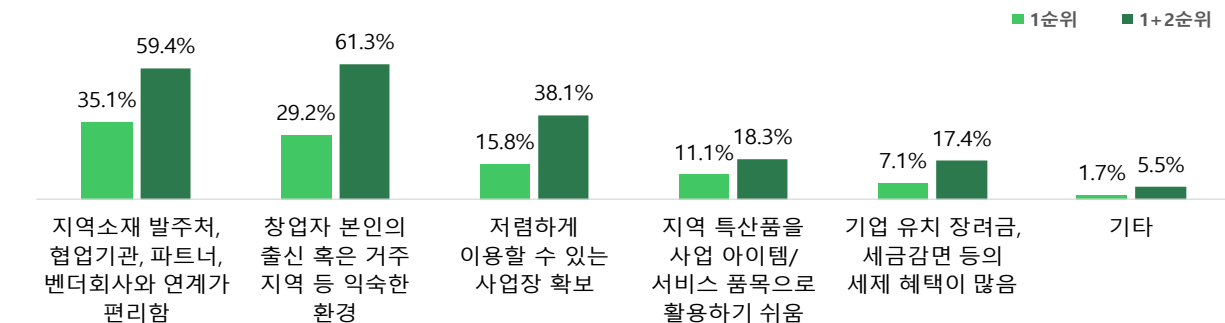
창업시 주요 고려요인 (n=2,188개사)



2 지역에서 창업하면 유리한 점: ‘지역 발주처 등 협력사와 연계’ 35.1%

- 中企는 지역에서 창업하면 유리한 점(1순위 응답)으로 ‘지역소재 발주처, 협력기관과 연계’의 편리성(35.1%)을 첫 순위로 꼽았음
- 뒤이어 ‘창업자 본인의 출신지 혹은 거주지역 등 익숙한 환경’(29.2%), ‘저렴한 사업장 비용(15.8%)’, ‘지역 특산품을 사업아이템으로 활용(11.1%)’순으로 유리하다고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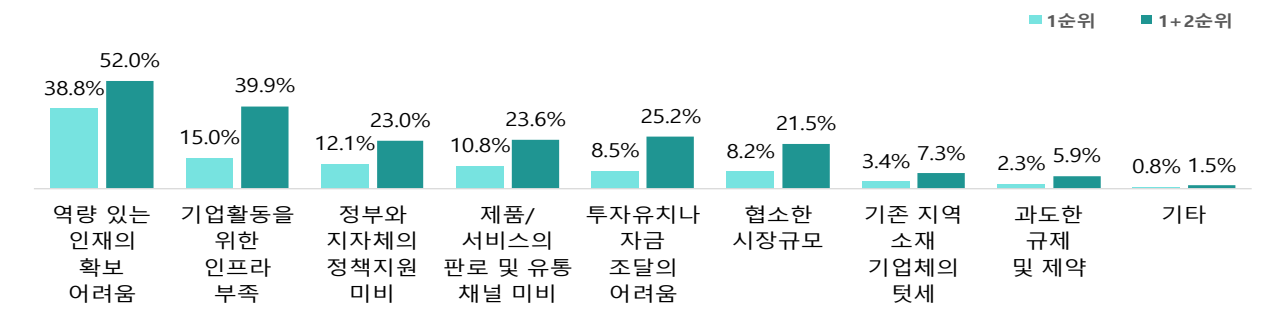
지역에서 창업하면 유리한 점 (n=1,164개사)



③ 지역에서 창업하면 불리한 점: 인재확보 38.8%와 경영 인프라 부족 15.0%

- 반면, 지역에서 창업하면 불리한 점(1순위 응답)으로 ‘역량있는 인재 확보 어려움’이 38.8%로 가장 높았으며, ‘기업활동을 위한 인프라 부족(15.0%)’, ‘정부와 지자체 정책 미비(12.1%)’, ‘제품·서비스의 판로 및 유통 채널 미비(10.8%)’ 순으로 응답

지역에서 창업하면 불리한 점 (n=1,164개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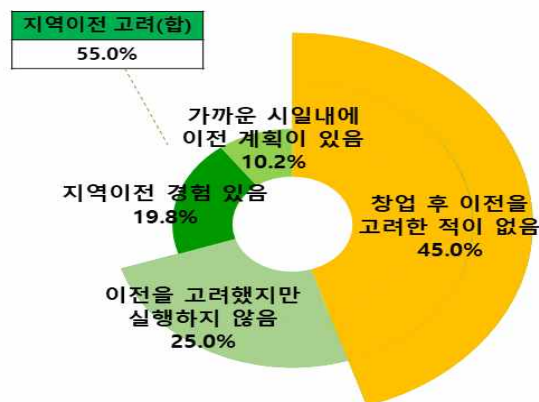


2 中企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

① 지역이전 및 고려여부: 수도권 中企 중 55.0%가 지역이전을 고려

- 지역이전 및 고려 여부에 대해 ‘지역 이전을 고려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’는 응답이 25.0%, ‘가까운 시일 내 이전계획이 있다’는 기업이 10.2%, ‘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’이 19.8%로 지역이전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 기업은 모두 합쳐 55.0%에 달함
- 즉, 절반이 넘는 中企가 지역이전과 관련한 경영판단 경험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, 中企의 45.0%는 ‘창업 후 이전을 고려한 적이 없다’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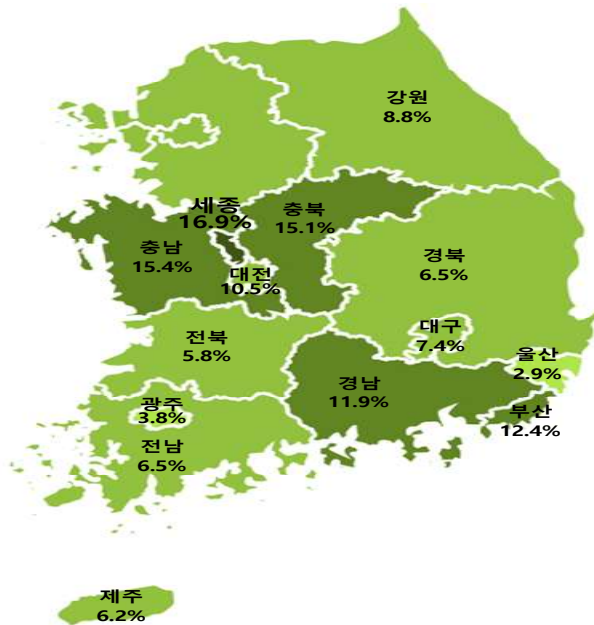
지역이전 및 고려여부 (n=1,024개사)



② 이전 희망지역: 대전/세종/충청 57.9%, 부산/울산/경남 27.3%

- 선호지역을 권역별로 보면, 中企 57.9%가 ‘대전·세종·충청’을 선택했으며, 뒤이어 ‘부산·울산·경남(27.3%)’, ‘광주·전라(16.2%)’, ‘대구·경북(14.0%)’ 순으로 나타남
- 지역으로는 ‘세종시(16.9%)’를 희망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, 뒤이어 ‘충남(15.4%)’, ‘충북(15.1%)’, ‘부산(12.4%)’, ‘경남(11.9%)’, ‘강원(8.8%)’ 순으로 선호

지역이전 희망지역(n=780개사)



< 지역 이전 희망지역(권역별) >

순위	권역별	비율(%)
1	대전/세종/충청	57.9
2	부산/울산/경남	27.3
3	광주/전라	16.2
4	대구/경북	14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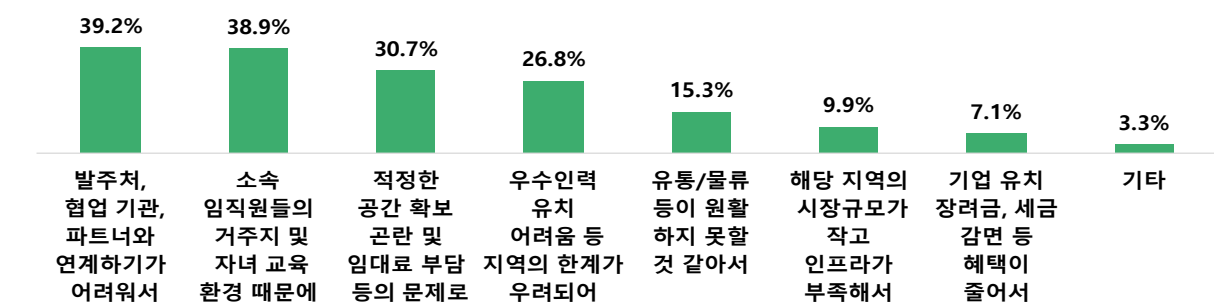
< 지역 이전 희망지역(지역별) >

순위	지역별	비율(%)
1	세종시	16.9
2	충남	15.4
3	충북	15.1
4	부산	12.4
5	경남	11.9
6	강원	8.8
7	대구	7.4

③ 지역이전을 고려했지만, 未실행 이유: 협력사 연계 곤란 39.2%, 임직원 거주 및 자녀교육 환경 38.9 %

- 지역 이전을 고려했지만,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‘발주처, 협업기관 등 협력 파트너와 연계가 어려워서’라는 응답이 39.2%로 가장 높았으며, ‘임·직원 거주지 및 자녀교육 환경’을 이유로 든 中企도 38.9%에 달했음
- 그 외 ‘임대료 부담 등 공간 확보 곤란(30.7%)’, ‘우수인력 유치가 어렵다(26.8%)’는 응답도 골고루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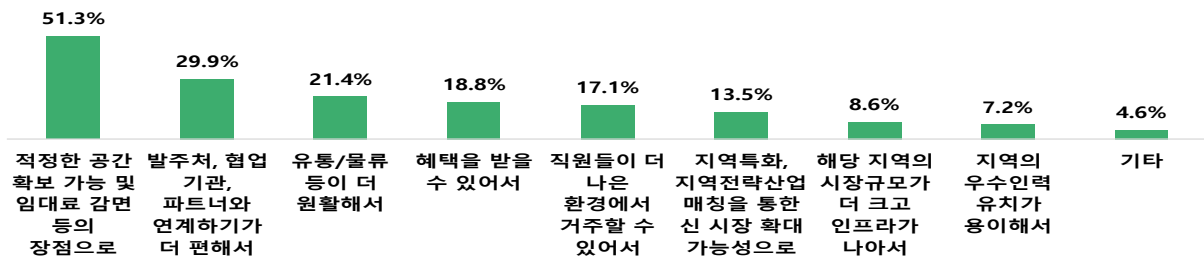
지역이전 고려했지만, 실행하지 않은 이유 (n=548개사)



4 지역이전을 고려하고 실행한 이유: 공간 확보 및 임대료 감면 51.3%

- 지역이전을 고려하거나 실행한 이유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반이상인 51.3%의 中企가 ‘적정한 공간 확보 가능 및 임대료 감면의 장점’을 선택했음
- 그 다음으로 ‘발주처, 협업기관, 파트너와 연계의 편리(29.9%)’, ‘유통·물류 원활(21.4%)’, ‘지역이전의 혜택(18.8%)’ ‘직원들의 거주환경이 나아져서(17.1%)’, ‘지역특화, 지역전략산업과 매칭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(13.5%)’, ‘지역 우수인력 유치가 용이(7.2%)’ 순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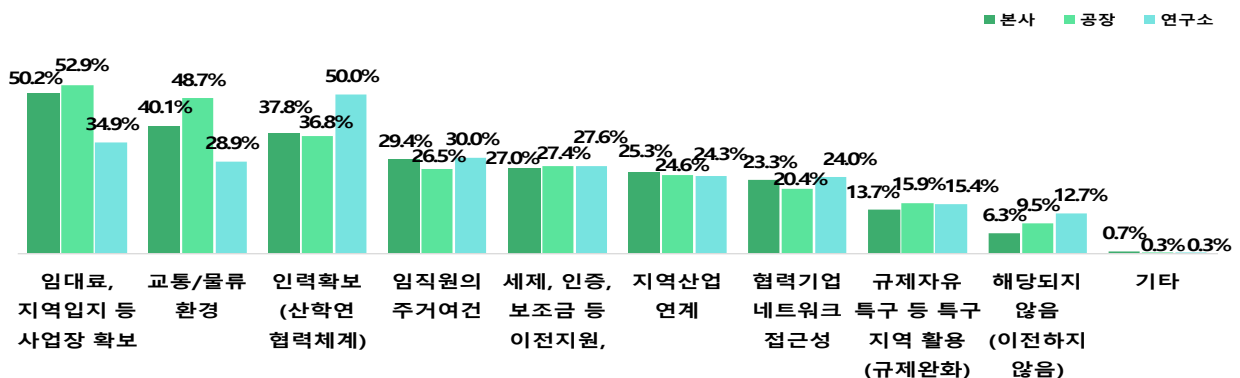
지역이전 고려하거나 실행한 이유 (n=608개사)



5 지역이전시 고려사항(본사기준): 사업장 확보 50.2%, 교통물류 40.1%, 인력확보 37.8%

- 지역이전시 고려사항으로 본사와 공장의 경우는 ‘사업장 확보’라는 응답이 각각 50.2%(본사), 52.9%(공장)로 가장 높았으며, 연구소의 경우는 ‘인력확보(50.0%)’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응답함
- 그 다음으로는 본사와 공장 이전 모두 교통, 물류 환경(본사 40.1%, 공장 48.7%), 인력확보(본사 37.8%, 공장 36.8%)가 뒤이었고, 특히 연구소 이전은 사업장 확보(34.9%) 외에도 임직원의 주거여건(30.0%)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옴
- 그 밖에 공통적으로 세제·인증 보조금 이전지원(본사 27.4%), 지역산업 연계(본사 24.6%), 협력기업 네트워크(본사 23.3%), 규제자유 특구 등 특구지역 활용(본사 13.7%) 등 고른 응답 분포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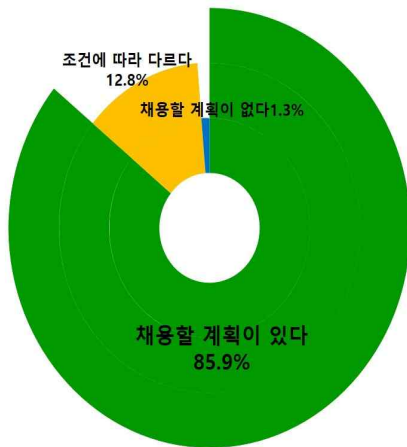
지역이전시 고려사항 (n=1,156 개사)



⑥ 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 고용창출 계획: ‘더 뽑겠다’는 中企 85.9%

-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고용창출 계획을 살펴보니, ‘채용계획이 있다’는 응답이 85.9%로 높게 나타났고 ‘채용할 계획이 없다’는 기업은 1.3% 였으며, ‘조건에 따라 다르다(12.8%)’라고 응답해 고용계획을 유보한 기업도 있었음
- 고용창출 규모(평균)를 알아본 결과, 경영관리·회계·행정 2.0명, 연구개발·R&D 2.8명, 마케팅·홍보·영업 2.2명, 생산직·단순노동 6.4명으로 나타남

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고용창출 계획 (n=608 개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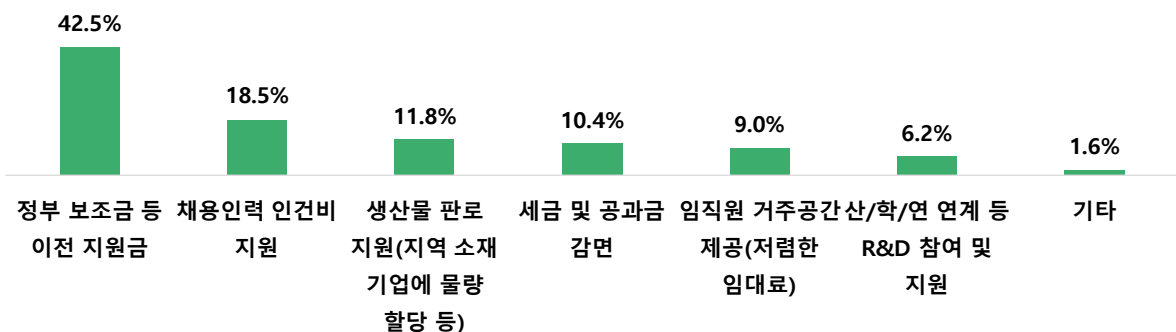
< 고용창출 규모 >

구분	사례수	1명	2명	3명	4명	5명 이상	구분 평균 명
		%	%	%	%	%	
경영관리/회계/행정	(435)	53.3	29.4	8.5	0.7	8.0	2.0
연구개발/R&D	(440)	35.2	34.5	14.1	4.1	12.0	2.8
마케팅/홍보/영업	(432)	46.5	32.2	10.0	3.7	7.6	2.2
생산직	(479)	15.7	21.7	12.9	7.9	41.8	6.4

⑦ 지역이전시 필요한 인센티브: 이전 지원금 42.5%, 인건비 지원 18.5%

- 中企의 42.5%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‘정부 보조금 등 이전 지원금’을 선택함
- 그 다음으로는 ‘채용인력 인건비 지원(18.5%)’, 생산물 판로지원(지역소재기업 물량할당 등)(11.8%)’, 세금 및 공과금 감면(10.4%), 임직원 거주공간 제공(저렴한 임대료)(9.0%), 산·학·연 연계 등 R&D 참여 및 지원(6.2%) 순으로 응답

지역이전시 필요한 인센티브 (n=2,188 개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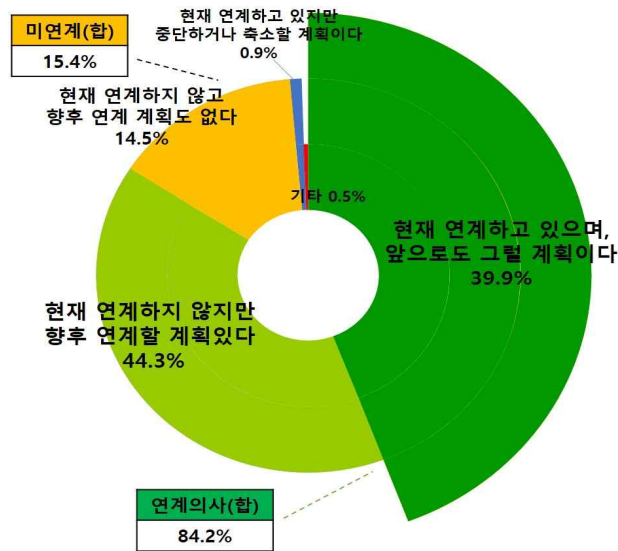


3 지역특성 연계와 정책펀드

1 지역특성 연계 계획: 中企 84.2%가 지역특성 연계에 긍정적

- 中企 39.9%가 ‘현재 지역특성과 연계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연계할 계획’이라고 응답했고, ‘현재는 연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연계할 계획이 있다’고 응답한 기업이 44.3%에 달해 지역특성 연계에 긍정적인 기업이 84.2%에 이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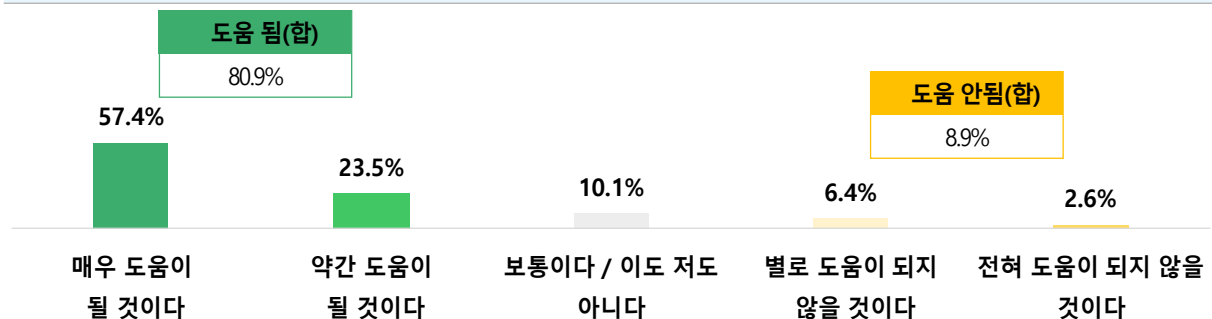
지역특성 연계여부 및 계획 (n=2,188개사)



2 지역 中企 정책펀드 필요성: 中企 80.9%가 ‘지역기업 육성 정책펀드’ 도움 될 것

-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가 조성된다면 어느 정도 도움될 것인지를 설문한 결과 ‘매우 도움이 될 것’이라는 응답이 57.4%, ‘약간 도움이 될 것’이라는 응답이 23.5%로 조사기업의 80.9%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
- 반면 ‘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’(2.6%), ‘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’(6.4%)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음

지역中企 정책펀드 필요성 (n=2,188개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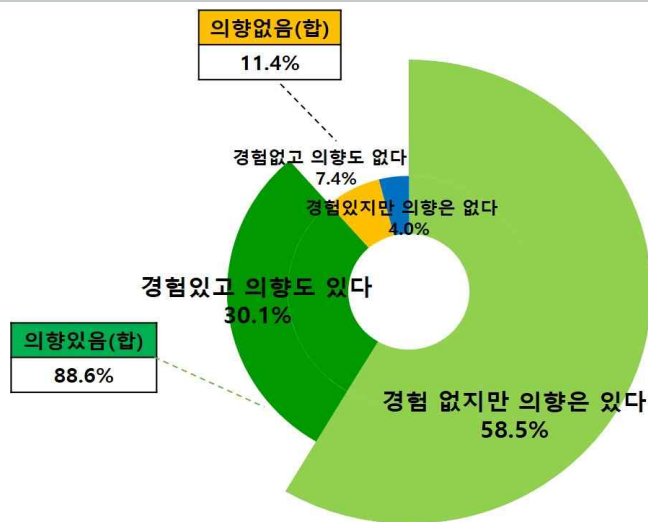


4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업 정주화 여건 개선 ▶▶

1 지역 중견기업과 매칭: 中企 88.6%가 의향있다

- 지역 중견기업과 매칭의향을 살펴본 결과, 中企 58.5%가 ‘경험은 없지만 의향 있다’고 응답했고, ‘경험 있고 의향도 있다’는 응답이 30.1%로 지역 중견기업과 매칭 의향에 긍정적인 기업이 전체 88.6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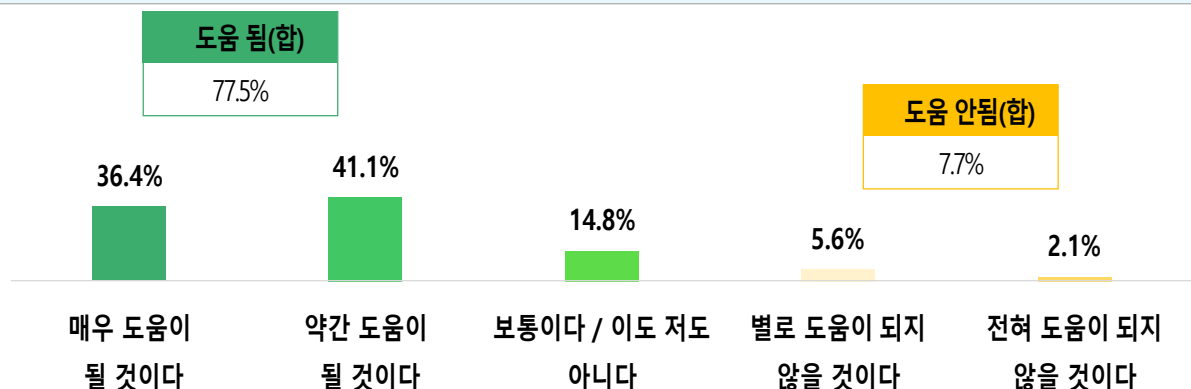
지역 중견기업과 매칭 의향 (n=1,164개사)



2 지역기업간 네트워크 효과: 도움 될 것이다 77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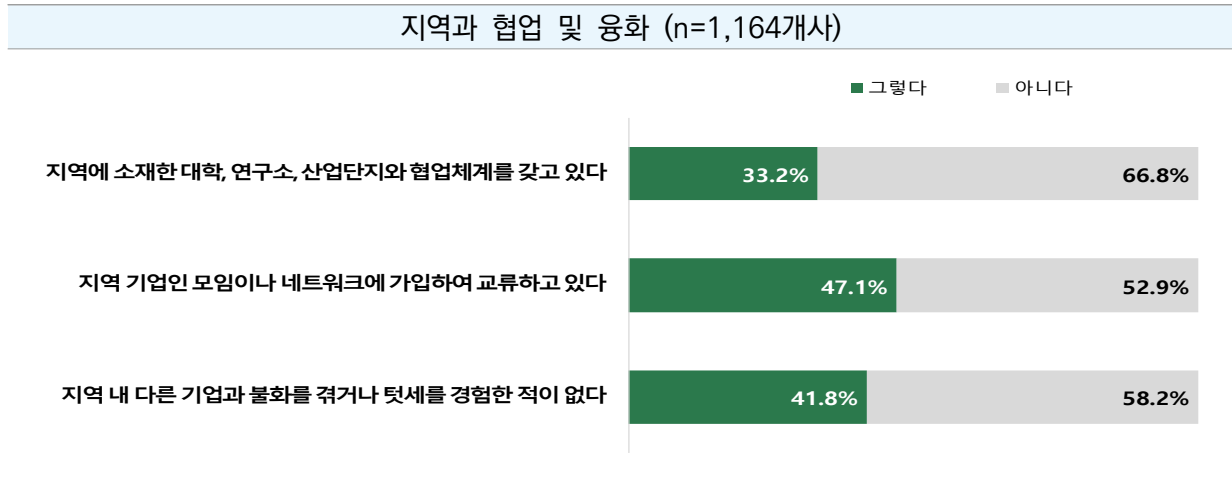
- 中企 77.5%가 지역 기업간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‘도움이 될 것이다’(매우 도움 36.4%+약간 도움 41.1%)라는 응답
- 반면, ‘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’(별로 도움되지 않음 5.6%+전혀 도움 되지 않음 2.1%)라는 기업도 7.7%를 차지했음

지역기업간 네트워크 효과 (n=1,164개사)



③ 지역과 협업 및 융화 여부: 지역과 협업체계 있다 33.2%, 지역탓세 경험 58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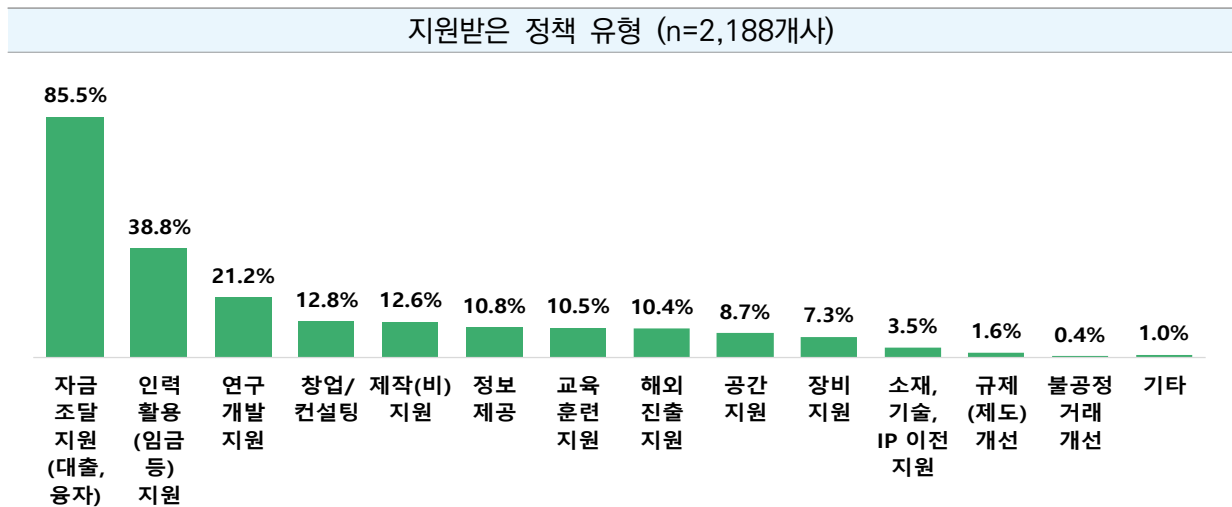
-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과 협업 및 융화 여부를 물었더니 33.2%만이 ‘지역 대학, 연구소, 산업단지와 협업체계를 갖고 있다’고 응답
- 또한 절반이 안되는 47.1%가 ‘지역 기업인 모임이나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교류’하고 있으며, ‘지역내 다른 기업과 불화를 겪거나 텃세를 경험했다’는 기업도 58.2%에 이르렀음



⑤ 中企 지원 정책 수요 및 정책평가

① 지원받은 정책 유형(복수응답): 정책자금 85.5%, 인력지원 38.8%, 연구개발 21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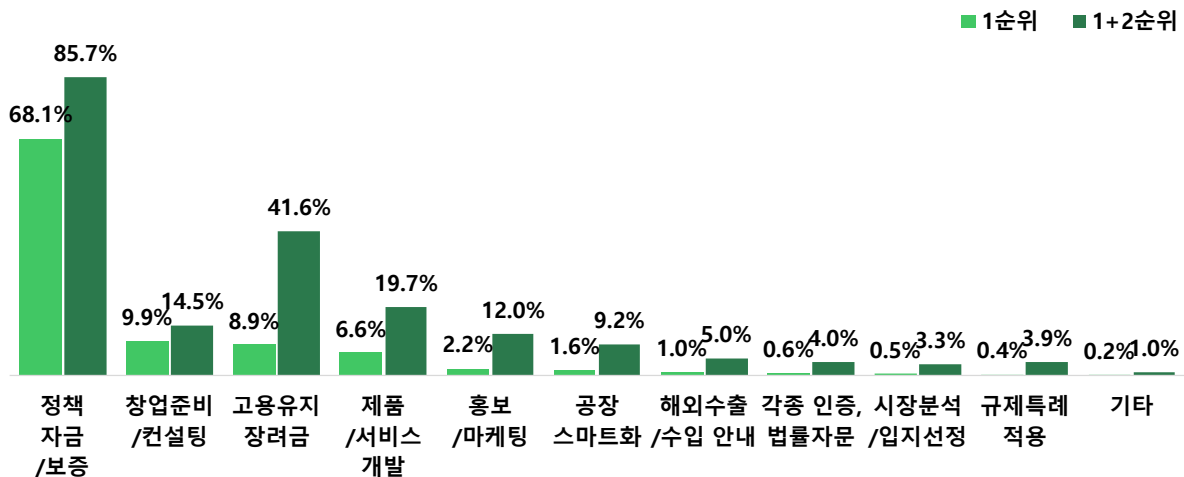
- 지원받은 정부정책 유형을 살펴보니, ‘자금조달지원’이 85.5%로 가장 많았고, ‘인력활용(임금 등) 지원(38.8%)’, ‘연구개발 지원(21.2%)’ 순으로 응답
- 그 다음으로는 ‘창업컨설팅 지원(12.8%)’, ‘제작(비) 지원(12.6%)’, ‘정보제공(10.8%)’, ‘교육훈련 지원(10.5%)’, ‘해외진출지원(10.4%)’, ‘공간지원(8.7%)’, ‘장비지원(7.3%)’, ‘소재, 기술, IP 이전 지원(3.5%)’, ‘규제(제도) 개선(1.6%)’, ‘불공정 거래 개선(0.4%)’, ‘기타(1.0%)’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② 지원 정책 수요(복수응답): 정책자금(85.7%), 고용유지 장려금(41.6%) 가장 필요

-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中企의 85.7%가 ‘정책자금’을 선택했으며, ‘고용유지 장려금’이라는 응답도 41.6%에 달함
- 이어서 ‘제품·서비스 개발(19.7%)’, ‘창업준비 및 컨설팅(19.7%)’, ‘홍보와 마케팅(12.0%)’ 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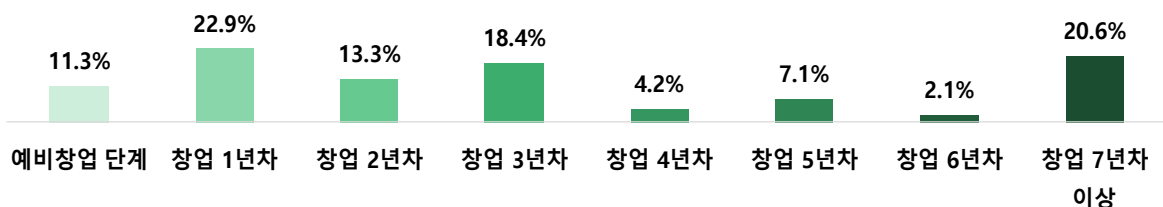
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(n=2,182개사)



③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기(복수응답): 창업 3년차 까지 65.9%

-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, 창업 1년차가 22.9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, 예비창업 단계 11.3%, 창업 2년차 13.3%, 창업 3년차 18.4% 등 예비창업부터 창업 3년차까지 비중이 65.9%에 달함
- 이에 따라 창업 초기에 정부 지원정책 수요가 집중돼 있음을 나타냄
- 이와 함께 창업 7년차 이상도 20.6%를 차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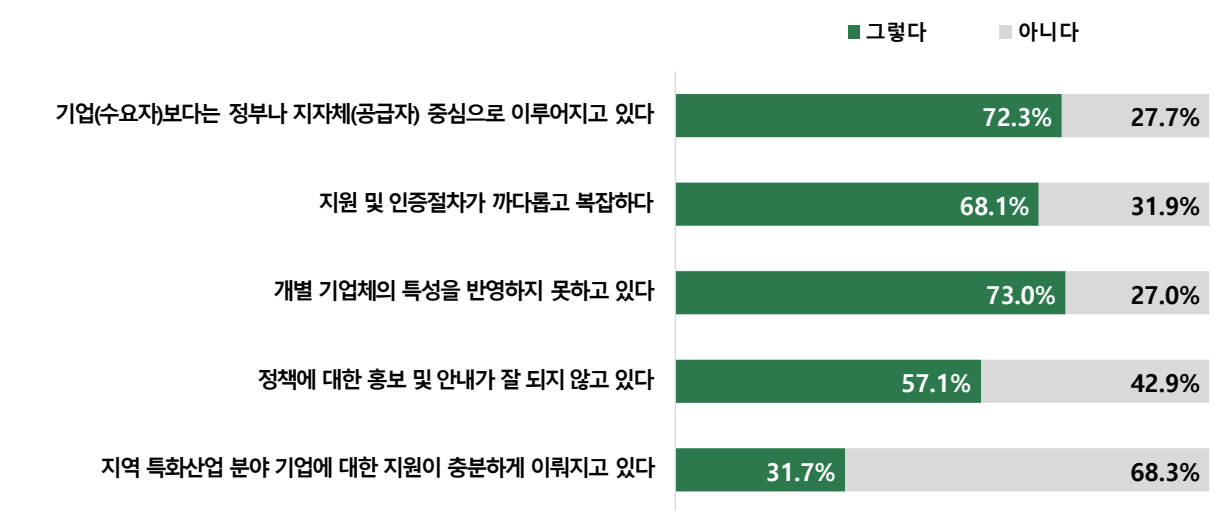
정부지원이 필요한 시기 (n=2,188개사)



4 지원정책 평가: 공급자 중심이다 72.3%, 지원 절차 까다로워 68.6%

- 지원받은 정책 평가에 대해 中企의 72.3%가 ‘기업(수요자)보다는 정부나 지자체(공급자) 중심’이라고 응답했고, ‘지원 및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복잡’하다는 응답도 68.1%를 차지함
- 또한, ‘개별 기업체의 특성 미반영(73.0%)’, ‘정책홍보 부족(57.1%)’, ‘지역특화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불충분(68.3%)’이라는 응답이 많았음

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(n=2,188개사)



6 건의사항

구 분	주요내용
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	• 운영자금,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• 기업별 정책자금 한도 증액 • 설비 투자시 원활한 자금지원 • 정책자금 절차 및 서류 간소화 • 획일적 기준보다는 기업특성을 고려한 정책자금 평가 • 정책자금 신청 후 신속한 집행 • 7년이상 기업의 저금리 대출
中企 지원체계	•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책연구를 통한 필요 기업지원 • 기술력 검증을 통한 체계적 지원 • 기업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판단 • 개별 기업분석에 따른 기업특성을 고려한 지원
정책안내 및 홍보	• 영세사업자 대상 홍보 확대 • 지역별 지원기관을 만들어서 맨투맨 지원
지역 일자리 창출	•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• 청년 외에도 중·장년 고용지원금 필요
기타	• 법인세 인하, 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혜택 • 마케팅, 판로지원 확대 • 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거래처 확보 지원

03 정책 시사점

1 기업 활동 전반을 고려한 지역 창업 우호 생태계 조성 ▶▶

○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中企의 창업 중시요인(입지조건 등), 지역 유리요인(협력 연계 등), 지역 불리요인(인재확보 곤란 등)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지역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

- 中企는 창업할 때 ‘본사나 공장 입지조건(교통, 물류 등) (36.7%)’, ‘주력 상품·서비스 경쟁력 확보(29.0%)’, ‘지역의 발주처, 협업기관 연계(13.8%)’ 등을 선택해 기업 인프라와 함께 사업성, 지역 네트워크, 인력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○ 특히, 지역 창업의 장점(‘지역업체나 기관과 협업’, ‘출신지, 거주지 등 익숙한 환경’, ‘저렴한 사업장’)을 극대화 시키고, 불리한 여건(‘인재확보 곤란’, ‘인프라 부족’)을 상쇄 시킬 수 있는 지역 中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함

- 中企의 35.1%가 ‘지역소재 발주처, 협력기관과 연계’가 지역에서 창업할 때 유리하다고 응답했으며, ‘출신지, 거주지 등 익숙한 환경(29.2%)’, ‘저렴한 사업장(15.8%)’, ‘지역특산품을 사업아이템 활용(11.1%)’ 순으로 응답
- 반면, 지역 창업시 불리한 점으로는 ‘인재확보가 어렵다’(38.8%)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, ‘기업활동 인프라 부족(15.0%)’, ‘정부와 지자체 정책 미비(12.1%)’ 등으로 나타나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공급과 경영 인프라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야함을 시사

2 中企 지역이전 정책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▶▶

○ 지역 이전 잠재적 수요가 많은 만큼,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 : 지역이전을 고려했으나 실행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 등을 분석해 지역이전에 대한 中企의 잠재적 수요를 실행단계로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지역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 발굴·제안

- 이미 ‘지역으로 이전한 기업(19.8%)’ 외에도 ‘지역이전을 계획 중(10.2%)’이거나, ‘이전을 고려했지만 미실행 기업(25.0%)’ 등 지역이전을 고려했던 수도권 中企가 55.0%를 차지하며, 지역이전 잠재적 수요(35.2%*)를 실행단계로 이끌 수 있는 정책 고민

* 잠재적 수요: 지역이전 계획 中(10.2%)+지역이전 고려했지만 미실행 기업(25.0%)

- 지역이전을 고려했지만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‘발주처, 협업기관, 파트너와 연계하기 어려워서(39.2%)’, ‘임·직원 거주지 및 자녀교육 환경(38.9%)’, ‘임대료 부담 등 공간확보 곤란(30.7%)’, ‘우수인력 유치 어렵다(26.8%)’라고 응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필요
- 지역이전 인센티브로 ‘이전지원금(42.5%)’, ‘인건비 지원(18.5%)’, ‘판로지원(11.8%)’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, 중진공이 추진하는 ‘강원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(지역이전 지원금 지원)’, ‘내일채움공제(中 小 企 人 력 의 장 기 재 직 유 도)’, ‘수출마케팅 지원사업’과 연계가능

○ 지역이전을 추진할 경우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과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 후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기업 유치 전략수립 필요

- 선호도가 높은 이전지역을 권역별로 보면, ‘대전·세종·충청(57.9%)’과 ‘부산·울산·경남(27.3%)’, ‘광주·전라(16.2%)’이며, 반면 선호도가 낮은 권역은 ‘대구·경북(14.0%)’, ‘강원(8.8%)’과 ‘제주(6.2%)’로 나타남
-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중진공 등 지역혁신기관이 적극적으로 ‘기업유치 및 이전지원 프로그램’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,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

○ 지역 이전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中 小 企 가 85.9%로 中 小 企 의 지역 유치 지원정책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中 하나

-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고용창출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85.9%(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유보적 입장까지 포함시 98.7%)로 높은 편이므로 이전기업이 지역인력을 채용할 때, 인건비 지원, 산·학·연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촉진 필요

3 지역특성 연계에 긍정적 공감대 형성

○ 지역특성 연계지원 사업은, 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유인과 지역의 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

-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특성 연계 여부 및 계획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보면, 현재 연계하고 있거나(39.9%), 앞으로 계획이 있는(44.3%) 적극적 의사표현 기업의 비중이 84.1%에 달해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연계지원 정책수요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음
 - 현장수요에 대응해 중진공이 추진하는 ‘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’, ‘지역상생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’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 지원사업 발굴 및 확대

4 지역 中企 정책펀드 적극 검토 필요



○ 지역맞춤형 정책펀드 조성의 경우 지역별 투자환경, 기업현황을 분석해 실제 지역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

-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中企 정책펀드 조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80.9%로 높게 나타남
- 해당 정책펀드는 지역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초기투자*를 받은 후 후속투자**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그로인해 지역인재 유출 가속화 및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느슨하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능

* 초기투자 지역소재 비중: 개인엔젤 30.2%, 엔젤클럽 30.4%, 액셀러레이터 33.9%(출처: 부산TP '지역균형 뉴딜펀드 설립 및 운영', '20.11.)

** 창업투자회사(VC)의 지역소재 비중은 8.7%(지역13개/전국149개)로 수도권 집중화(출처: 부산TP '지역균형 뉴딜펀드 설립 및 운영', '20.11.)

5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정주화 여건 개선



○ 지역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방안은 지역 창업과 이전기업 정착을 돕는 효과적 정책수단 : 지역 중견기업과 매칭, 지역기업간 교류 활성화, 지역혁신기관의 협업 지원체계 구축, 지역전문가 육성 등

- 지역 중견기업 등 향토 우수기업과 사업매칭에 대해서는 88.6%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, 지역기업간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도 77.5%의 기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,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
- 반면, 지역과의 융화 여부에 대해 '지역소재 대학, 산단 연구소와 협업체계가 없다(66.8%)', '지역기업인 모임이나 네트워크가 없다(52.9%)'는 기업이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, '지역 텃세를 경험했다(41.8%)'는 응답도 많았음
- 종합해볼 때, 대다수 中企가 지역 중견기업 등 지역기업 간 매칭과 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지역과 융화 단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따라서 '이전기업과 향토기업간 공동 사업', '지역 중견기업-이전기업 멘토링 지원', '지역혁신기관 협업 지원체계', '지역전문가 육성' 등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, 현재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'글로벌 퓨처스 클럽', '글로벌 CEO클럽', '중소기업 융합회' 등의 역할 확대와 내실화 방안도 함께 고민 필요

6 정책 수요자(기업) 관점으로 中企 지원사업 점검 ▶▶

○ 기업성장 단계 中 창업초기에, 핵심 지원정책(‘정책자금’, ‘고용유지 장려금’ 등)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

- 中企는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(중복응답)으로 ‘정책자금(85.7%)’과 ‘고용유지 장려금(41.6%)’을 많이 선택했으며, 지원이 필요한 시기는 예비창업(11.3%)부터 창업1년차(22.9%), 창업2년차(13.3%), 창업 3년차(18.4%) 등 창업초기에 정책수요 집중

○ 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집행 및 수요자 관점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

- 中企의 72.3%는 현재 ‘지원정책이 기업(수요자)보다는 정부나 지자체(공급자)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’고 생각하고 있으며, ‘지원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’라는 기업도 68.1%에 달했음
- ‘개별 기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(73.0%)’, ‘정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부족하다(57.1%)’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정책집행 구조나 접근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 지원절차 등 전반적인 中企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맞춤형 정책 발굴과 함께 정책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음
- 또한 전술했다시피, 많은 기업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연계를 희망하고 있지만, 지역특화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(68.3%), 향후 지역 中企 지원 정책방향 검토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사업의 확대 고려



발 행 인 김학도

편 집 인 정책연구실

발 행 처 중소기업진흥공단

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(52851)

전화 : 055-751-9273, 팩스 : 055-751-9411

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

본지에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
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